

44^회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6.02.23.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2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9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16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23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28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30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33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38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43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48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52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56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61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65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70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74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78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82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87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92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96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100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104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108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112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116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120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124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128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132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136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140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143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146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149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152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154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157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159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162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64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66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68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70

(제44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지난주 10대 핵심 키워드

- ① 속도전정책 ② 공모사업구조 ③ 정치적중립성 ④ 필코노미(감정소비) ⑤ 가격질서·구독모델
⑥ 인프라 대형화 ⑦ 예술인 소득격차 ⑧ 인구감소·지방소멸 ⑨ AI 전환 ⑩ 체류형 K컬처

■ 주요 쟁점들

- ① ‘속도’인가, ‘구조설계’인가? →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난 중·장기 관점에서의 구조·생태계 전환
 ☞ 대형 이벤트(BTS 공연 등)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조되는 한편,
 ☞ 공모사업 중심 구조로 지역 문화재단의 외부 자원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 기관장 공모 탈락 및 재공모 사례는 정책 실행 과정의 혼선을 보여준다.
- ② 시장 가격 질서와 공연 생태계 재편 → 단기 매출 확대 전략과 가치 기반 가격 체계 확립 사이의 균형
 ☞ 구독형 할인 모델 확산(40% 할인 시즌권 완판)과 과도한 할인 구조는
 ☞ 공연 시장의 가격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 한편 상주 음악가 및 지역 상주 모델은 안정적 운영 실험을 확대하는 중이다.
- ③ 인프라 확장과 운영 내실 → 건립 중심 정책’에서 ‘운영 역량·콘텐츠 축적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 대형 문화시설 건립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 소장품·전문 인력·콘텐츠 축적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 폐교·빈집 등 공공 자산 활용 전략 역시 정비 중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 ④ 예술인 복지 확대와 소득 양극화 → 복지 정책 확대가 구조적 시장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 저리 대출·연금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은 강화되고 있으나,
 ☞ 다수 예술인의 저소득·겸업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 작가 노조 출범 등 노동권 담론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 ⑤ 인구 감소·지방 소멸과 문화의 역할 → 문화정책이 인구·경제 정책과 결합하는 통합 설계가 가능한가
 ☞ 2030년 이후 학령 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험 지수 상승이 예상된다.
 ☞ 문화는 정주·체류·관계 설계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빈집·폐교·원도심을 문화 기반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확산 중이다.
- ⑥ AI 전환과 K-컬처 구조 변화 → 기술 혁신과 공공성·윤리·교육 체계를 어떻게 병행 설계할 것인가
 ☞ AI는 창작 방식뿐 아니라 제작 구조와 예산 체계까지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K-컬처는 소비 단계를 넘어 ‘체류형 문화’ 단계로 확장 중이다.
 ☞ 외국인 체류 증가와 지역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 종합 정리

2026년 문화정책은 ‘확장’과 ‘전환’이 교차하는 시점에 있다. 속도·이벤트·인프라 중심의 확장 국면과 생태계·운영·노동·체류 중심의 구조 전환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책 프레임은 다음의 전환 축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 → 방향 • 건립 → 운영 역량 • 할인 → 가치 기반 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확대 → 시장 구조 개선 • 소비 → 체류·정주 설계 |
|--|---|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최근 문화정책은 속도를 앞세워 확대되고 있으나, 공모 중심 구조와 정치적 논란 속에 자율성과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공공의 설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연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 문화정책 속도 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할때

- “속도감 있는 문화 정책 추진”...BTS 광화문 공연 지원 조율 중(KBS, 2026. 02.12.)
 - 속도전 문화정책 선언...예술인 공제·문화패스 확대, BTS 광화문 공연 지원 조율
- [탐사 기획_문화정책] '공모사업 공화국'이 된 지역문화재단...성과와 균열?(MOVE, 2026. 02.20.)
 - 중앙은 공모로 정책 분절·플랫폼화, 지역은 선정경쟁 심화. 문화재단은 외부재원 KPI 의존 속 자율·지속성 약화

○ 대선 지지 이력 인사 기관장 임명으로 정치적 중립·전문성 논쟁 확대

- 최취영 문체부 장관 "산하 기관장 공모, 빨리 진행...마음이 급하다"(뉴스1 2026. 02.12.)
 - 최취영 장관 “정책 설계 완료했으나 실행 더뎠다”...콘진원장 공모 32명 지원·전원 탈락, 재공모 신속 추진
-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이재명 지지' 배우 장동직(조선일보 2026. 02.20.)
 - 20대 대선 공개 지지한 모델 출신 배우, 공연예술과 무관한 채 2029년 2월까지 3년 임기
- 李大통령 지지 '구마적' 이원종, 연봉 2억 콘텐츠진흥원장 탈락(조선일보 2026. 02.12.)
 - 이재명 지지 배우 이원종, 연봉 2억·임기 3년 콘진원장 공모 탈락

○ 기능보다 감정...‘필코노미’가 바꾸는 여가·문화 소비 지형

- 기분이 지갑을 연다... 필코노미 시대, 감정이 돈이 되는 순간(커리어온뉴스, 2026. 02.19.)
 - 2026 여가 소비 기능보다 ‘기분’...SNS 기반 감정형 체험 확대
- 감정이 지갑을 여는 ‘필코노미’ 시대 홍보 전략(NewsWire, 2026. 02.09.)
 - 필코노미 확산 예술·공간·콘텐츠도 공감·위로 중심 소비로 전환

○ 공공 지원 확대와 자생적 공연 생태계 형성 사이의 정책적 과제 부상

- 흥행작을 나눠주는 나라_‘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둘러싼 문화정책의 퇴행(MOVE, 2026. 02.13.)
 - 문체부 140억 투입 흥행작 지역유통...창작 아닌 ‘배급’ 위주 논란
- 울산 공연시장, 이제는 ‘제값’ 받아야(경상일보, 2026. 02.19.)
 - 2022~2024 분석, 과도한 할인 수요 억제...울산 ‘제값’ 요구

○ 구독형 할인모델 확산과 브랜드 차용 난립 속, 공연시장 신뢰·가치 재정립 과제 부상

- 5만원만 내면 40% 무제한 할인 시즌권 돌풍...공연도 구독시대(매일경제, 2026. 02.08.)
 - 세종 ‘구독 플러스’ 4만9600원에 40% 할인...1000세트 56분 완판, 시즌 매출 3억→10억 확대
- ② 2부 | '빈필'은 오지 않았는데...필하모닉 앙상블은 전국을 순회?(MOVE, 2026. 02.11.)
 - 빈필 연상 앙상블 20~30개 난립...신년음악회, ‘이름값’ 의존 구조 고착

○ 공공 공연장 요금 논란과 지역·상주모델 확산 속 구조 전환

- [단독] 계약 땀 없던 ‘대관료 폭탄’...슈퍼갑 예술의 전당(한겨레, 2026. 02.12.)
 - 예술의전당 후원사 명시 공연 ‘기업 콘서트’ 간주...대관료 2배 인상 적용 논란
- 연주자·공연장 모두 윈윈...클래식계 ‘상주음악가’ 바람(한국경제, 2026. 02.10.)
 - 조성진·안선 등 상주음악가 확대...연주자 실험·공연장 수익 ‘윈윈’ 구조 확산

- 클래식이 마을을 깨우다...소공연장의 예술 실험(한겨레, 2026. 02.15.)
 - 서울 2시간 거리 유구읍에서 3~4만원 공연을 가까이(1m) 듣고, 70명 규모 클래식·무료공연도 즐겨

○ 현장은 실험으로 확장하는데, 공공 인프라는 수집·콘텐츠 축적 구조가 취약

- 신진 작가 키우며 미술계 제3의 길 만드는 대안 공간들(매일경제, 2026. 02.09.)
 - 루프·사루비아·대구 '씩' 등 대안공간, 신진 작가 발굴·실험 전시로 미술계 '제3의 길' 구축
- 540억 투입 전주시립미술관, 소장품 예산은 1억...내실 부족 우려(전북일보, 2026. 02.10.)
 - 전주시립미술관 540억 중 수집비 1억(0.18%)...전문성·내실 부족 우려

○ 제도적 안전망은 확장되지만, 다수 예술인의 소득·노동 불안은 여전한 구조적 간극

- 최대 1.2억 저리 대출에 국민연금 지원 확대...올해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뉴시스, 2026. 02.18.)
 - 전세 1.2억(금리 1.95%) 상향·연금 50% 확대, 1만 8천명 300만원 지원 및 복지금고 출범
- 서울 예술인, 창작 공간 불안정...소득 낮아 42.1% 겹업(뉴시스, 2026. 02.10.)
 - 서울 예술인 7만 1,384명, 42.1% 겹업...예술수입 1,304만원·월세 57.7%
- "작가도 노동자" 작가노조 이달 말 공식 출범(매일노동뉴스, 2026. 02.19.)
 - 작가 80여명 '작가노조' 2/28 출범...205명 조사서 연수입 500만원 ↓ 50.7%

○ 공간·비평·지원이 연결된 지역 창작 인프라 구축

- [전주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7년째 이어지는 예술 생태계 육성(투데이안, 2026. 02.20.)
 - 전주 19~39세 청년예술인 25팀에 팀당 340만원 지원...7년째 지속 추진
- "화성 예술인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OhmyNews, 2026. 02.05.)
 - 시립미술관을 건립 중인 화성시 장흥아뜰리에 연계하는 레지던시 트랙 신설, 관내 폐교, 빈집 활용한 공간 운영 요구
- 지역 예술가 알리려...또따또가, 비평실험(국제신문, 2026. 02.10.)
 - 또따또가, 25팀 156명 입주...작가별 1:1 비평집 발간

○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말하면서도, 제도 설계에선 예술기업이 주변화되는 정책 불균형 문제 제기

- 인천시, 다른 분야 지역 우대 적용해도...예술기업만 '홀대'(경기신문, 2026. 02.18.)
 - 100억 ↓ 건설·용역엔 지역 기업 우대 적용, 예술기업은 가산점 1~2점만 부여되어 상대적 홀대

○ 빈집·공실을 문화로 재생...청년예술 결합한 원도심 활력 전략

- 청년예술·상권 결합...북구 'ART 인 PLACE' 상가 공모(파이낸셜뉴스, 2026. 02.10.)
 -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지난해 9개 상가 1만 7,067명 참여하여 호응 얻은 'ART 인 PLACE' 확대
- 진주 원도심 골목, 관광 명소로 만든다(경남도민일보, 2026. 02.08.)
 - 진주 원도심에 213억 투입...공방골목·체험관 조성, 10년간 1조1,080억 관광개발 추진
- 세종 상가 공실 해법은... "문화시설 조성 과 임대인 지원 필요"(중도일보, 2026. 02.05.)
 - 세종 어반아트리움 공실률 43.6%(전국 13.5%)...아동·청소년 문화시설·2~3%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촉구
- [빈집의 재탄생] 작품에 감성을 더해준 낡은 아파트 빈집(중도일보, 2026. 02.05.)
 - 50년 넘은 1,164세대 수정아파트, 절반 빈집...월세 15만원 공간을 2017년 갤러리로 재생, 9년째 2주~1개월 단위 전시 운영

○ 인구 감소 본격화...노동력 부족·지방 소멸 '임계점' 도달

- 머스크가 한국에 집착한 이유 있었네... '딱 4년 남았다'(한국경제, 2026. 02.12.)
 - 2030부터 취업자·경제활동인구 감소...2034년 122만명 추가인력 필요
- 전주마저 뚫렸다...전북자치도, 인구 소멸의 '마지노선' 붕괴(전북도민일보, 2026. 02.09.)
 - 전북 소멸위험지수 35.0 전국 14위...전주 64.1→58.5 ↓, 고령화율 26.6%

- 터미널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 전주 터미널 공동화가 던지는 '지방 소멸'의 경고(경남뉴스, 2026. 02.22.)
 - 전국 터미널 326→283곳 감소, 43곳 폐쇄·진주·상남 노선 60% 감축, 하루 4회로 축소 등 터미널 공동화가 지방소멸 가속 경고

○ 빈집을 철거·정비 대상이 아닌, 인구·문화·경제 회복의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정책 재설계 필요

- 기획 경제편 = 4장 3편. 빈집을 고치면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투데이충남, 2026. 02.09.)
 - 충남 빈집 12.7%...정비 중심 정책 반복, 정착 설계 부재가 근본 한계
- 대구광역시,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3억 원 투입해 빈집 128동 정비 추진(국제뉴스, 2026. 02.10.)
 - 대구시 국비 15억 포함 33억 투입...빈집 128동 정비 추진
- 단돈 1700원에 빈집 내놨더니...'인기 관광지' 된 시골 마을 [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 시대](한국경제신문, 2026. 02.05.)
 - 전남 고령 27.2%·10만명당 빈집 1,118가구...日·伊는 세계·1유로 정책으로 해법 모색
- 빈집, '사회적 골칫덩이' 아닌 '자원'으로..해외서 해법 찾을까(DAILY POP, 2026. 02.09.)
 - 빈집을 '자원'으로 전환...일본·유럽 민관협업·과세·리모델링 해법 주목

○ 학생 급감과 폐교 방치...학교 인프라 구조 전환 시급

-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2026곳...입학생 10명 이하 2257곳 전망(대한경제, 2026. 02.19.)
 -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2,026곳...입학생 10명 이하 2,257곳 전망
- 전국 폐교 376곳 활용 않고 방치...관리비만 빼먹는 '유령 공공자산'(서울신문, 2026. 02.19.)
 - 전국 폐교 4008곳...최근 3년 104곳 추가, 376곳 미활용·82곳 30년 방치

○ 문화·관광 통합형 재단 모델 확산 속, 전문성·재정 지속성·거버넌스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완주문화관광재단 전환 필요"(전북일보, 2026. 02.12.)
 - 완주군의회 문화재단→문화관광재단 전환·전문경영인 도입 촉구
- 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논란 빛은 문화재단 출자 동의안 통과(경기일보, 2026. 02.10.)
 - 양주시 5억 출자·28.2억 출연...문화관광재단 설립안 통과
- 여수문화재단, 이르면 상반기 출범...임원 공개모집(연합뉴스, 2026. 02.09.)
 - 여수문화재단 상반기 출범 추진, 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 착수

○ 공공부문 고용 확대 흐름 속, 문화기관은 '숫자 증가'보다 인력 구조·운영체계의 질적 혁신이 과제로 부상

-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유연성 확대 정책 시급"(매일노동뉴스, 2026. 02.18.)
 -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운영 경직성 완화와 인건비·인력계획 유연화 촉구
-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09.)
 - 예술·스포츠·여가업 16.4만명, 전년비 5.1천명↑(3.2%)
-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 7000명... 통계 집계 후 최대치(천지일보, 2026. 02.09.)
 - 공공기관 정규직 2만7021명(35%↑)...청년 88.6%, 현원 40만 4,143명 최대
- 인천 공립박물관, '늘리기'에서 '잘 운영하기'로 정책 전환 필요(라이브뉴스, 2026. 02.10.)
 - 인천 공립박물관 15곳 운영...신규 확충 속 전문인력·정책팀 신설 등 질적 전환 필요

○ AI는 창작 방식뿐 아니라 제작 구조·예산 체계까지 바꾸는 '문화산업 전환 변수'화

- AI, 문화예술 생태계를 바꾸다(무등일보, 2026. 02.08.)
 - AI 확산으로 창작 주체·도구 개념 변화...미술·문학·공연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 재편
- 인공지능은 어떻게 한국 문화산업의 DNA를 바꾸고 있나(테크41, 2026. 02.19.)
 - 200조 K컬처, 제작비 1/10↓·R&D 1515억·예산 7.8조 투입

○ AI 문해력 격차 확대 속, 지역 기반 읽기·쓰기 교육의 역할 부각

- 성적·경제수준 따라 벌어지는 'AI 문해력 격차'...'취약계층 교육 강화해야'(이투데이, 2026. 02.19.)
 - AI 정보 사실판단 역량 격차...성적 상 3.65·하 3.25, 소득 상 3.61·하 3.25

- '내일은 베스트셀러 저자'...문해력 키우는 '대구 책 쓰기'(TBC뉴스, 2026. 02.18.)
 - 2009년 시작 대구 청소년 책쓰기, 누적 570권·올해 40여권 출간

○ K컬처, 소비를 넘어 체류의 시대로

- [광화문에서/박선희]K를 넘어선 'K컬처'의 시대... 무엇이 가장 한국적인가(동아일보, 2026. 02.18.)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그래미 수상, K컬처 탈국경·혼종화 확산
- [시사쇼]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아시아경제, 2026. 02.19.)
 - 한국 체류 외국인 278만명 역대 최다...40세 이하 59%, 영·이·프 1000% ↑
- 지난해 54만 명 찾은 '서울 공공한옥', K-주거문화 확산 플랫폼으로(한국미디어뉴스, 2026. 02.18.)
 - 서울 공공한옥 20여곳 54만명 방문, 미리내집 3,754명·보문동 956명 접수 등 최대 경쟁률 기록

○ 지자체 주도형 K-로컬 브랜드 글로벌 확산 전략

- 전주문화재단, 밀라노서 한복의 미를 알리다(전라일보, 2026. 02.18.)
 - 2월11~16일 밀라노 올림픽 현장서 전주한복 홍보관 6일 운영
- 강릉시, 일본 시부야 팝업스토어 성료... 3천여 명 방문(강릉넷TV, 2026. 02.09.)
 - 1월29~2월1일 시부야 팝업 4일 운영, 3천명 방문·사전예약 600명

○ 보관 중심 시설에서 참여·창작 중심 공간으로의 전환하는 도서관

- '도서관을 왜 가요?' 서울대생 돌변한 이유가... '놀라운 현실'(한국경제, 2026. 02.19.)
 - 서울대 도서관 출입 6년새 40%↓, 성인 독서율 43%...전자책·스터디카페 선호 속 리모델링 확대
- 인천문화재단, 경인교대와 함께 인천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개소(내외뉴스통신, 2026. 02.19.)
 - 2월10일 경인교대 도서관 4층 70평 규모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개소
- 계양구 효성도서관, 청년 작가 창작공간 '작가의 방'시범운영(경인신문, 2026. 02.06.)
 - 만 19~39세 청년 작가에 1인 집필공간 무료 제공, 그림책 작가 김은지와 함께 전시·독후 특강도 진행

○ 창작-교육-공공 인프라를 잇는 예술교육 생태계 재설계

- '예술로 지역을 잇는다'...춘천문화재단, 다장르 공감 프로젝트 입주예술인 공개 모집(더센뉴스, 2026. 02.20.)
 - 예술교육실험실 입주 예술인 4팀 선정, 3~7월 활동비 및 공간지원, 시민대상 3회 프로그램 운영 등
- 작곡가 김형석, 영 옥스퍼드대와 K-컬처 교육과정 만든다(뉴시스, 2026. 02.20.)
 - 김형석, 옥스퍼드와 K팝 인성·리더십 과정 개발·동요집 출간 준비
- 이은주 의원, K-컬처 흐름을 예술교육으로 잇는 공립 교육 기반 구축 필요성 강조(전국시민의소리, 2026. 02.20.)
 - 경기도 이은주 의원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 공립 예술특성화고·전담센터 설립 촉구

○ 지역 먹거리 축제의 브랜드화 전략과 민관 협력 모델 확장

- 원주라면축제, 올해 대폭 확대...원주 대표 먹거리 축제로 전환(강원일보, 2026. 02.19.)
 - 원주라면축제 예산 6천만→2.7억 확대, 민관 협력 브랜드화

○ 청년 '쉬었음' 46.9만명 시대...고립 속 느슨한 공동체로 관계 회복 모색

- '쉬었음', 20대 후반 비중 늘어... "팬데믹 영향...맞춤 정책 필요"(한겨레, 2026. 02.20.)
 - 청년 '쉬었음' 46.9만명...20대 후반 확산, 세대별 맞춤 대책 촉구
-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2030 흑한 '할일공동체' 모임 뭉길래?(머니투데이, 2026. 02.22.)
 - 월 1회 2~3명 모여 메일·일기 등 소소한 할일 함께...1인 가구 2030, 10명 내외 SNS 인증 모임으로 유대·외로움 해소

○ 광역·기초 지자체 문화 인프라 확장 경쟁...클러스터 전략 본격화

- 강원특별자치도 '2026 강원 문화예술 4대 중점 정책' 발표(강원일보, 2026. 02.10.)
 - 총 700억원 투입, 100억 추경으로 예술인 지원 확대·격차 해소

- 밀양시, 밀양아리랑 앞세워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전(연합뉴스, 2026. 02.20.)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전...**밀양아리랑 기반 음악산업·시민참여 생태계 구축 추진**
- 전남지사, ACC갔다... "광주 금남로에 예술복합단지 조성"(뉴스1, 2026. 02.20.)
 - 김영록 전남지사 ACC 중심 금남로 예술복합단지·K-아트클러스터 조성 및 광주·전남 1+5 문화수도 비전 제시
- 서산시, (가칭)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중도일보, 2026. 02.20.)
 - 서산 석남동 286-13 일원에 국악원 분원 등 6개 시설 조성, 실시계획 인가로 본격화

○ 기후위기, 새로운 문화장르로 부상

- 기후소설상 지원 2배 늘어...새 문학 장르 되나?(뉴스펜션, 2026. 02.18.)
 - 영국 기후소설상 지원액 2배 ↑ ...'클라이파이' 장르화·흥행성 확인, 한국 영상물 반영은 4% ↓

○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인프라 대형화' 경쟁 본격화

- 관광산업 활성화 카드 꺼낸 오세훈...한강변 개발에 도시정비까지 총력전(아시아투데이, 2026. 02.20.)
 - 여의도 6만7944㎡ 제2세종문화회관 착공, 2029년 준공...**한강 문화벨트 조성**
- "K-컬처밸리 또 지연"...지방선거 앞둔 고양지역 주요 변수로 떠올라(뉴스1, 2026. 02.16.)
 - K-컬처밸리 협약 12월 연기...**지방선거 고양 핵심 쟁점 부상**
- 조용식 전 청장 "황등 폐석산, 세계적 미디어아트 중심지로"(아이뉴스24, 2026. 02.19.)
 - 전북 익산 조용식 후보자 **황등 폐석산 세계적 미디어아트 특화지구 공약**
- [6.3 지방선거 이모저모] "수원에 '삼성역사박물관' 건립"... 권혁우, 1호 공약 발표(중부일보, 2026. 02.11.)
 - 권혁우, 수원에 '삼성역사박물관' 건립...**산업유산 문화관광 거점화 공약**

○ 시민사회, 중앙의존 성장 벗어나 지역순환·자치 전환 요구

-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 막는 지방선거 공약을"(중기이코노미, 2026. 02.12.)
 -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자금 역외유출 차단**"...**지역화폐2.0·공공은행 공약 제안**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 제안집 발표(SSE미디어랩, 2026. 02.14.)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돌봄·공간·활동가 등 100대 마을정책 관련 정책 제시**

○ 대법 "성과급=평균임금"...삼성 퇴직자 집단소송

-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하라"... 대법원 판결에 삼성 퇴직자들, '줄소송'(인사이트, 2026. 02.19.)
 - 대법 "**삼성 TAI 평균임금 포함**"...**퇴직자 22명·40명 집단소송 이어져**

○ 잊혀져가는 것에 대하여-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시점은?

☞ 2026년 뉴스1 기사에서 "정책 설계는 완료했으나 실행이 더디다"는 발언을 보며,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될지 궁금해집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의미(Landscape Times, 2014. 05.07.)
 - 단편적 지역문화 법체계 보완, **고유 자원 활용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발표(The Public, 2020. 02.10.)
 - 2020.2.1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발표**, 4대 전략·15과제 추진
- 지역문화진흥계획을 말한다-는 것의 어려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토론회> 리뷰 좌담(양산타임스, 2020. 02.09.)
 - 2025년 11월 19~27일 4개 권역 순회, 제3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 양산시, 제1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착수(양산타임스, 2020. 02.09.)
 - 2026~2030 **양산형 지역문화진흥계획 착수**, 생활권 기반·문화격차 해소 추진

(한주를 정리하며) 속도는 붙었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2026년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조로 대형 공연 지원을 조율하고, 예술인 공제와 문화패스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동력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속도가 곧 방향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중앙은 공모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지역은 선정 경쟁에 매달리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공모사업 공화국’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외부 자원과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가 강화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축적 기반은 약화되고, 수치 관리에 밀려 장기 전략은 뒤로 밀린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기초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구조적 개선 없이 변화만 가속되는 현실 앞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 산하기관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정책 설계의 완결이 강조되지만, 실행 단계의 신뢰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설득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행정의 리더십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시장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분’을 소비하는 흐름 속에서 구독형 할인 모델은 단기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과도한 할인과 브랜드 차용은 장기 신뢰를 잠식한다. 흥행작 중심의 유통 구조 또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약화시킨다. 반면 상주음악가 제도와 소공연장 중심의 실험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관건은 시장 논리를 넘어 이러한 실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이와 맞물려 인프라 확장과 복지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형 시설 건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물을 짓는 일이 곧 문화를 축적하는 일은 아니다. 수집·연구·운영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외형은 커져도 기반은 약해진다. 예술인 복지 역시 확대되었지만 낮은 소득과 겸업 구조 속에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과 복지, 노동을 분리해 다루는 한 구조적 간극은 좁혀지기 어렵다. 정책의 초점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에 두어야 한다.

한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AI 확산은 문화정책의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있다. 폐교와 빈집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자산이며, 문화·교육·창업이 결합될 때 지역은 순환을 회복할 수 있다. 시는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문해력 격차를 낳고 있다. 기술 적응의 속도보다 지역의 학습과 축적 구조가 더 중요하다. K컬처가 소비를 넘어 체류의 단계로 확장된 지금, 성과의 화려함보다 지역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더 본질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2025년 2월에 발표되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발표되지 못한 상태다. 새로운 5년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계획이 지연되면서, 설계는 과연 완결된 것인지, 방향은 분명한지 다시 묻게 된다. 계획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자율성과 축적 구조, 창작의 지속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

**문화정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확장의 경쟁도 아니다. 사람과 장소, 기억과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속도보다 방향, 확장보다 내실. 2026년 문화정책이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이 아닐까?**